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11년도 제16차 회의

1. 일 자 2011년 6월 23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임 승 태 위 원 (의장직무대행)
김 대 식 위 원
최 도 성 위 원
강 명 현 위 원
이 주 열 위 원 (부총재)
4. 결석위원 김 중 수 의 장 (총재)
5. 참 여 자 강 태 혁 감 사 김 재 천 부총재보
장 병 화 부총재보 장 세 근 부총재보
박 원 식 부총재보 김 준 일 경제연구원장
이 상 우 조사국장 정 희 전 정책기획국장
민 성 기 금융시장국장 김 종 화 국제국장
김 윤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 용 회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30호 — 2011년도 3/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

(1)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 및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30호 — 「2011년도 3/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을 상정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국내경기 상승 등에 힘입어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전반적으로 무난한 상황이지만, 업종별 신용도별 기업자금사정 격차가 큰 가운데 금융기관의 보수적 여신운용으로 가계대출에 비해 중소기업 대출이 활발하지 않은 점, 최근 중소기업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점,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ast-track program) 지원실적이 감소세를 멈추고 3월 이후 계속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011년 3/4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는 전분기와 같은 7조 5,000억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거시건전성 측면이나 대출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현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후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위기사 실시하였던 조치들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총액한도대출을 꾸준히 줄어나갈 필요가 있지만, 가계대출이 생각보다 많이 늘고 있고, 가계부채문제가 우리경제에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소기업대출 유인을 줄이는 정책결정은 시의적으로 다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의결문 작성 · 가결

의결사항

2011년 3/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7조 5,000억원으로 정한다.